

투데이 칼럼

의료비 과잉, 환자를 희생시키는 병원의 민낯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제도라고 전 세계에서 이구동성으로 칭찬을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병원의 행태를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미국의 병원 제도를 바짝 뒤쫓아 가는 것만 같아 씁쓸한 기분을 느끼고 있어 몇 자 적어본다.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의료 현장은 한편으로는 큰 발전을 이루고 친절하다는 평을 받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환자의 권리와 경제적 부담을 무시한 현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2024년 의료 인력 매년 2천 명 증원이라는 의료 개혁 정책을 내세우며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고 발표한 후 의정 갈등의 여파가 심각하게 나타났다. 많은 1차 진료 기관의 젊은 의사들이 과업에 동참하여 환자들이 제대로 처치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등 위험에 노출된 바 있다.

이후 영업비용의 손실 복구를 위한 목적인지는 모르나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의 눈높이를 외면한 과도한 비용 청구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얼마 전 나의 가족에게도 그 민낯은 생생히 드러났다. 누이동생이 전북의 한 종합병원에서 유방암 절제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수술 과정에서 유방 보형 관련 비용 4백만 원과 나머지 비용 200여만 원 함께 600여만 원이 비급여로 사전에 환자 동의 없이 결정되는 일이 있었다. 결국 나중에야 동의를 써 주었지만, 이미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은 막대했다.

이들 문제 삼으려는 오판의 권



이 만 호
본보 정치부장

유에 여동생은 앞으로 같은 병원에서 방사선 치료도 받아야 되는데 무려한 가족의 행위로 인해 자신의 치료에 지장을 받고 싶지 않다며 조용히 마무리하겠다는 여동생의 속 깊은 말에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또 한 번은 둘째 아들이 휴일에 갑작스레 척추디스크로 인하여 운신을 못해 119 구급차에 실려 긴급으로 중형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기에 부랴부랴 달려가 보았다.

입원 후 MRI 촬영 결과 다행스런게도 수술이 필요 없다는 의사의 소견을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수술 없이 치료를 위해 환자의 동의를 받기는 하였지만 200여만 원에 달하는 주사제를 비급여로 사용하며 청구했다.

의료급여 적용은 물론 없었고, 환자의 호주머니 사정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이는 단순한 사례가 아니라, 병원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어 자행되는가?

첫째, 의료기관의 수익 구조가 환자 중심이 아니라 병원 운영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비급여 항목은 병원 입장에서는 재정 확보 수단이지만, 환자에게는 불가

피한 커다란 경제적 부담으로 돌아온다.

둘째, 환자의 동의 절차가 형식적이라는 점이다. 환자가 충분히 설명을 듣고 선택할 권리는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동의서를 받는 경우가 많다. 이는 환자 권리의 심각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사회적 여론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병원이, 오히려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구조적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이다.

정부의 의료 인력 증원 정책도 의미가 있지만, 의료 질 향상만으로는 환자 보호가 충분치 않다. 제도적 장치와 윤리적 기준, 비용 투명성이 함께 강화되어 서민도 부담 없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보장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팔자는 병원을 감독하는 감독기관이 너무 영리를 취하고자 하는 병원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해법은 분명하다.

첫째, 비급여 항목에 대한 사전 설명과 동의 절차를 철저히 하고,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만 한다.

둘째, 병원 감독기관에서는 병원 평가와 관리에 있어 환자 부담의 적정성을 중요한 지표로 삼아, 환자에 대한 병원의 과도한 비용 청구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셋째, 의료 서비스의 공익적 성격을 강조하고, 수익과 환자 권리를 조화시키는 병원 경영 모델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본다.

환자는 단순한 병원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 지불자가 아니다. 생명과 건강을 맡기는 신뢰의 주체이자, 의료 시스템의 정당한 수혜자다.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이 이를 망각하면, 사회적 신뢰는 깨지고 국민 부담은 더욱 가중된다.

이번 사태는 우리 가족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의료비 과다 청구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작지만 커다란 경고음이라는 생각이다.

정책과 제도가 아무리 발전해도, 환자 한 사람의 권리와 부담을 외면하면 의료는 그 존재 이유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이제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은 의료비 과다 청구 관행을 근절하고, 환자 중심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의료는 존귀한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소중한 일이며, 환자의 권리와 경제적 부담을 함께 고려하는 사회적 책임이 반드시 뒤따라야만 할 것이다.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의료, 투명하고 정직한 비용 구조, 그리고 의료진과 병원이 함께하는 신뢰의 회복,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진정한 의료 개혁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것이다. 통계상으로도 배달업에 종사하는 라이더보다 착용비율이 낮았다.

이륜차 운전자 스스로 안전모 착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변화를 가져야 하며 운행하기전 안전모부터 꼭 챙기는 습관을 가져야만 한다. 또한 안전모뿐만 아니라 법규 준수를 준수하여 사고예방에 동참해주길 바란다.

이정우고창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교통관리계장 겸임

독자제언

여름철 이륜차의 운행을 하면서 답다는 이유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이로 인한 오토바이 운전자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륜차 교통사고는 총 9만2천8건 이중 사망자는 2천 221명이 다.

이는 사고 100건당 사망률 2.4명으로 다른 차종에 비해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이륜차 교통사고 중 특히 안전모

이륜차 안전모 착용은 필수

의 유무는 많은 차이를 나타낸다. 이륜차의 안전모는 차량의 안전띠와 에어백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오토바이 운전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고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머리 손상으로 인해 중상을 입을 확률이 더 커진다. 그럼에도 낱씨가 덥고 귀찮다는 이유로 안전모 미착용 운행을 하

거나, 안전모를 착용을 하더라도 끈을 잘 조이지 않은 채로 운전하는 경우, 규격에 맞지 않은 안전모를 쓰고 운행하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특히, 고령운전자의 경우 안전모를 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생활용도로 이륜차를 사용하면서 안전모를 쓰지않고 운행하는

사설

친일과 이두황 단죄비

최근 전주에서 어느 시민단체가 친일파의 행각을 알리겠다며 세운 시설물을 부셨다. 구한말 이두황은 동학농민군을 학살하고, 명성황후 시해에 가담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된 인물이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이두황의 친일 행각을 널리 알리겠다며, 사후 100년인 2016년 단죄비를 세웠다.

원래 전주 기린봉에 있는 이두황 묘 옆에 세우려고 했지만, 일대가 후손들 땅이라 300여 미터 떨어진 도로가를 택했다. 단죄비에는 “역사와 민족의 죄인, 총량한 황국신민 이두황을 깨운다!”라고 새겼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일단 단죄비 재설치가 먼저라고 보고, 전주시에 이두황의 친일 행각을 더 잘 알릴 수 있도록 위치 조정 등을 요청했다. 전주시는 이 의견을 반영해 신속히 복구하겠다고 밝혔다.

단죄비의 위치와 내용들을 전 반적으로 수정 검토해서 신속하게 복구해야 할 것이다. 광복 80년을 맞아 벌어진 이번 일을 계기로 다른 친일 흔적 등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다.

한편 이두황은 1858년 1월 한성부의 빈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1882년 무과에 급제하였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자 장위영(將衛營) 대관으로서 양초초토사 홍계훈 휘하에서 집압에 참여하였다.

이토 히로부미의 총애를 받았으며, 전라북도 관찰사로 있으면서 정미의병을 제압하는 이른바 남한 대토벌 작전을 주도하는 등 죽을 때까지 친일 행적을 저질렀다. 경술국치 이후에도 계속하여 전북도장관을 지내다가 1916년 신장염 악화로 인해 58세의 나이로 죽었다. 이토 히로부미의 양아들이 되길 간청했다.

새만금 RE100 산단 지정 문제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대전환에 맞춰 새만금도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먼저 RE100 산단 지정이 필수적이다. 새만금은 이미 스마트그린산단 등을 통해 준비가 돼 있어 RE100 산단 지정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새만금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도 중요하다. 특히 새만금호 수질 개선을 위해 해수 유통과 조력발전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

한편 새만금국가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은 새만금을 ‘RE100 산업단지’로 조속히 지정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산업 생존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다.

국내 산업계도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새만금산업단지는 재

생에너지 공급?신속한 정책 집행?글로벌 투자 매력도 등 모든 조건을 갖춘 최적의 RE100 산단 후보지다.

새만금은 이미 전국 최대 규모의 육상 태양광 300MW 사업을 준공해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 중이며, 인근에는 총 7GW 규모의 재생에너지 인프라가 계획되어 있다.

이러한 에너지 기반은 RE100 실현을 위한 안정적이고 충분한 전력 공급을 보장하며, 입주 기업들이 글로벌 RE100 기준을 충족하는데 최상의 조건을 제공할 수 있다.

새만금산업단지는 항만·공항·철도 등 트라이포트 물류 인프라가 완비되어 있고 종합보세구역으로도 지정돼 있다. 세계 유수의 글로벌 첨단·친환경 기업들이 요구하는 RE100 기준 충족과 수출시장 접근성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투자처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도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